

# 광주, 문화인프라 최하위… 쑥스러운 ‘문화수도’

10만명당 문화시설수 3.7개 전국 14위… 전남은 8.4개 3위

광주시의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수가 3.7개로 전국 16개 자치체 가운데 1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8.4개로 3번째 많은 곳에 끌렸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15일 전국 지자체별 문화기반시설 현황(1월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시설·문화원 등이다.

분석결과 인구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로 21.2개이고, 그 다음이 강원(11.3개), 전남(8.4개), 충남(7.6개), 충북(7.4개)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으로 3.1개이고, 부산(3.3

개), 광주(3.7개), 인천(3.8개), 대구(3.8개) 순으로 나타나 광역시 지역의 문화시설이 전반적으로 적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종로구 95.6개이고, 다음이 제주 서귀포시(36.9개), 서울 중구(36.2개)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1곳당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광주는 10.8개로 인천과 더불어 공동 6위, 전남은 7.3개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61.5개)였으며 서울(22.6개), 경기(15.9개)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7.2개)이었다.

박혜자 의원은 “지자체별 문화기

반시설 편차는 결국 국민들의 문화 접근성이 심각한 불균형을 조성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도서관(17개), 박물관(5개), 미술관(7개), 공연시설(20개), 문화원(5개) 등 모두 54개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에는 도서관(59개), 박물관(37개), 미술관(18개), 공연시설(25개), 문화원(22개) 등 총 161개 문화시설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서관 828개, 박물관 691개, 미술관 179개, 공연시설 826개, 문화원 228개 등 총 2752개 문화기반시설이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 자치단체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 수

광역자치단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원	합계	10만명당 문화시설수
제주	21	55	18	27	2	123	21.2
강원	47	69	10	30	18	174	11.3
전남	59	37	18	25	22	161	8.4
충남	51	43	8	37	16	155	7.6
충북	36	41	7	20	12	116	7.4
경북	62	60	14	33	23	192	7.1
전북	49	33	3	17	14	116	6.2
서울	116	106	33	285	25	565	5.5
경남	58	51	8	39	20	176	5.3
대전	22	16	5	23	5	71	4.6
경기	184	119	36	122	31	492	4.1
대구	27	13	3	45	8	96	3.8
인천	36	22	4	38	8	108	3.8
광주	17	5	7	20	5	54	3.7
부산	31	12	5	55	14	117	3.3
울산	12	9	0	10	5	36	3.1

〈박혜자 의원 제공〉



### 조마조마 ‘초보 라이더’

15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영산강변의 자전거 교육장에서 ‘초보 라이더’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자전거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일제잔재’ 동양척식회사 명의 토지 아직도 광주·전남에 35필지 있다

국가 소유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일제시대 수탈기관이었던 일본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건물이 광주와 전남에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창원시 성산) 의원이 15일 대법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을 8월 말 현재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는 325필지, 45만5000여m<sup>2</sup>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절반 이상인 176필지 28만5000여m<sup>2</sup>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 4개동(378m<sup>2</sup>), 울산 3개동 (287m<sup>2</sup>)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필지 3만8734m<sup>2</sup>, 부산 21필지 1만 4913m<sup>2</sup>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8필지에 1만745m<sup>2</sup>의 토지가 부동산 등기부에 남아있다. 강 의원은 호남에 등기부 록이 많은 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고향지대인 이를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물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14개동 1429m<sup>2</sup>가 동양척식회사 소유였으며, 대구에 가장 많은 5개동이 있었다. 이어 광주 4개동(378m<sup>2</sup>), 울산 3개동 (287m<sup>2</sup>)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DJ 모교 ‘목포상고’ 되살아난다

### 전남제일고, 이전 뒤 ‘목상고’로 교명 변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93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남제일고가 ‘목상(木商)고등학교’로 교명 재변경을 추진한다.

15일 전남제일고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목포상업고등학교에서 전남제일고로 바꾼 교명을 다시 목상고로 변경하는 안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를 통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목상고로 전환한다.

교명 변경은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 전통을 이어가는 취지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교명 변경과 함께 전남제일고는 이날 학교를 용해동에서 신도

교로 옮기기로 했다.

교명 변경은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 전통을 이어가는 취지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교명 변경과 함께 전남제일고는 이날 학교를 용해동에서 신도

### 50년 전통 빼놓았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전화/시각  
평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7시  
일요일: 오전9시~오전7시  
일요일: 오전9시~오전7시  
일요일: 오전9시~오전7시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 (N) 골드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 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orm NAVER |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 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 이름뿐인 구례·목포 ‘관광특구’

### 전남·전북 4곳 연간 외국인 관광객 2만명도 안돼

전남지역 관광특구인 구례와 목포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름뿐인 관광특구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관광특구 28개소를 조사한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광특구가 다수였다.

또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지 못한 곳은 목포와 구례를 포함해 전북 무주 구천동, 정읍 내장산 등 9곳이나 됐다.

전남과 전북지역 관광특구 4곳 모두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연간 1만 2000~1만 8000명 정도에 그쳐 관광특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였다.

특히 관광특구의 경우 임야·농지·

가공수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20개의 수산목을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의무제가 아닌 자율참여사업이다 보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희(고흥·보성) 의원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투명한 생산과정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가 관련 예산부족과 복잡한 등록절차 등으로 전제대상업체의 6.9%만 참여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수산물이력제는 국내산수산물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상업체 6만 4160곳 중 4427개 업체가 가입해 6.9%만 가입해 있다.

대규모양식장의 경우, 수산물 이력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3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예산 지원이 적어 사실상 생산자의 의지에 기대하다 보니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국 지자체 발주계약 모든 과정 공개

### 부정부패 차단… 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까지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다.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